

금지구역 양옆 버젓이 주차...위급상황 골든타임 놓친다

‘이태원 참사’ 계기 광주 불법 주차차 단속현장 가보니

광주에서도 불법 주차차로 소방당국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차차 금지 구역인 소화전과 횡단보도까지 불법 주차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헬러인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불법 주차차된 차량 때문에 119 구급대원들의 도착이 평소 이동시간의 3배가량 소요됐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지역 불법 주차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58만건에 달했던 불법 주차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코로나19로 인해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진행되면서 2020년 40만건으로 줄었다. 2021년 44만건으로 다소 증가했다가 올해는 10월까지만 불법 주차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45만건으로 늘었다.

광주시 북구 교통과 ‘이동식 불법 주차차 단속차량’이 10일 오전 9시 20분부터 11시까지 1시간 20분동안 불법 주차차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8건에 달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단속차량에 동행해 본 결과 불법 주차차 행태는 ‘심각’ 그 자체였다. 이날 북구 교통과가 단속에 나선 지역은 각화동 농수산물센터와 경신여고 인근 골목 등지였다.

소화전·횡단보도까지 불법 점령

용봉동 골목 입구부터 차량 막아

어린이보호구역도 ‘위험한 주차’

공사현장 중앙선 주차 등 심각

북구청 1시간20분간 과태료 28건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골목에는 입구에서부터 차량들이 주차돼있어 단속 차량조차 들어가기 어려웠다. 양복 2차선 도로인데 양 편 모두 불법 주차차가 돼 있어 차량 1대만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골목 안 도로에는 주차차 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연속으로 2~3개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특히 5대 불법 주차차 금지구역 중 하나인 소화전 앞도 불법 주차차는 여전했다. 아예 트럭이 막고 있어 화재가 났을 때 소화전 이용은 불가능해 보였다.

단속 직원은 “이 차량은 매번 이 소화전 근처에 주차 돼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해 해 차



이동식 불법주차차 단속 차량이 10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변해도 외우고 있다”고 말했다.

연속으로 불법 주차차 된 차량과, 교차로의 모퉁이에 주차를 해 놓은 트럭때문에 골목 일대는 수분간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용봉동의 어린이보호구역도 불법 주차차는 마찬가지였다. 불법 주차차 된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길을 건너려고 나오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2

만원으로 다른 곳의 3배에 달하지만 소용없다는 것이 단속직원의 전언이다.

공사현장은 더 심각했다. 각화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양복 4차선 도로는 흡사 주차장이었다. 길 양 옆 뿐만아니라 중앙선에도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구급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다.

주차된 차량에는 공사현장에서 날아오는 먼지를 막기 위해 비닐이 씌워져 있어 일일이 수기로 차량 번호를 적으면서 단속을 해야 했다.

이날 단속에 나선 교통과 직원들은 “평소에는 오전에만 200건 넘게 단속하는데, 오늘은 유독 차량이 적은편이다”면서 “불법 주차차 단속 민원이 전화로만 하루에 200건이 넘게 와 현장에 나가보면 2~3m 옮겨 주차를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불법 주차차가 늘어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할 경우 골든 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도로 내 불법 주차차는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면서 “특히 좁은 이면도로에서는 대형 소방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정도의 공간을 생각해 주차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보호관찰 종료 하루 앞두고 보이스피싱 재범...다시 교도소행

50대 가석방 취소

가석방 중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붙잡혀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다.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임 A(58)씨가 보호관찰 종료(11월 9일)를 하루 앞두고 가석방이 취소됐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수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북

역하다 지난 6월 30일 가석방됐는데 지난달 24일 교도소에서 또 다시 보이스피싱 현금을 수거하다 붙잡혔다.

경찰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가 A씨에게 돈을 건네기 직전 붙잡혔다.

목포보호관찰소는 사기 미수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으로 지난 9일 A씨에 대한 가석방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돼 잔여 형기를 모두 복역하게 됐다.

이래강 목포보호관찰소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 특성에 따른 보호관찰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집회 소음 단속 강화...시행령 경찰위원회 통과

앞으로 집회시 소음측정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집회시 소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집회 소음과 관련, 일정 시간 동안 평균 소음(dB)을 측정하는 ‘등가소음도’ 측정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순간적인 최고 소음(dB)을 규제하는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 사례가 늘면서 처벌 근거 신설 등 법 개정을 통해

소음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으로 소음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 측정방식을 악용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집회 소음을 동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소음 유지·중지 명령 등을 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무죄’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에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53)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만5000원을 부과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

선 무효가 되는데 양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양 의원과 보좌관 A(52)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지역민 등 43명에게 190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명절 선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43명 중 선거구민이 아닌 9명을 제외하고 34명, 150만원 상당의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명절 선물을 추가로 준비하면서 양 의원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양 의원도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

만 양 의원과 A씨 모두 양 의원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대상자 명단 등은 A씨가 모두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측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사촌동생인 A씨가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도왔고, 양씨가 그를 신뢰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들의 진술을 허위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양 의원의 공모를 부인했고 다른 직원들 진술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약 3년이 남아 기부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상열 전 호반그룹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법령상 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범행이 이르렀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것은 고려했던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약식기소 때 청구했던 것과 같은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친족, 임원 현황 등이 담긴 자료다. 검찰은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쳤다. /연합뉴스

<h3>상가 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h3>	<h3>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상업지구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6억 8천 <p>(보 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010-6670-9800</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style="text-align: center;">▶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서구풍암동 (상가주택)</td> <td>▶</td> <td>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td> <td>▶</td> <td>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td> </tr> <tr> <td>북구 삼각동 (어린이집)</td> <td>▶</td> <td>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td> </tr> <tr> <td>북구 신안동 (공장)</td> <td>▶</td> <td>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td> </tr> <tr> <td>광주 광산구 하남동 (공장)</td> <td>▶</td> <td>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td> </tr> <tr> <td>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td> <td>▶</td> <td>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td> </tr> <tr> <td>영암군 삼호읍 (숙박시설)</td> <td>▶</td> <td>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td> </tr> <tr> <td>장성읍 안평리 (농지)</td> <td>▶</td> <td>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010-2614-9801</p>	서구풍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	광주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삼호읍 (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 (농지)	▶	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
서구풍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																							
광주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삼호읍 (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 (농지)	▶	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																							